



생환 피랍 26일 만에 탈레반으로부터 풀려난 한국인 여성인질 2명이 13일 오후 아프간 수도 카불 서쪽 가즈니주의 한 도로에서 아프간 적신월사 직원들에게 인계되고 있다. 왼쪽이 김경자씨, 그 옆이 김지나씨. /AP=연합뉴스

김경자·김지나씨 석방

피랍 26일 만에...정부 "가즈니주 미군기지 보호"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에 납치됐던 한국인 여성 인질 가운데 김경자·김지나씨가 13일 밤 석방됐다. 인질이 석방된 것은 지난달 19일 이들이 피랍된 이후 26일째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지난 달 탈레반에 살해된 배형규, 심성민씨와 이날 석방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19명의 인질이 남아 있다. <관련기사 3·5면>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두 사람이 이날 오후 풀려나 우리 측에 인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이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측 보호 아래 있으며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에

피랍자 중 일부나마 풀려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탈레반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인계된 두 김씨가 13일 오후 9시50분(한국시간)께 가즈니주에 있는 미군 영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현지의 중재자들이 무장단체측으로부터 2명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우리 측 대표단에 넘겼으며, 우리 측 대표단은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신원확인을 거쳐 미군영내로 옮겼다.

두 사람의 건강상태와 관련, 당국자는 "결을 수 있는 정도로,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탈레반 측이 발표한대로 석방 조건은 없었다"면서

"탈레반 측은 선의로 풀어준다고 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건강검진이 끝나면 카불 인근의 바그람 기지내 한국 부대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귀국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당국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귀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기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소속 신자 등 한국인 23명은 지난달 19일 아프간 수도 카불 남쪽 가즈니주 카라바 지역에서 납치됐으며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이미 살해당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면 접촉



김경자씨 김지나씨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면접촉을 계속하면서 석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직·간접 접촉을 통해 남은 인질 19명의 안위를 확인해 왔는데 이들에게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소속 신자 등 한국인 23명은 지난달 19일 아프간 수도 카불 남쪽 가즈니주 카라바 지역에서 납치됐으며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가 이미 살해당했다. /채희중기자 chae@연합뉴스

이명박 후보측 밥 먹은 광주 270명 1억8천만원 과태료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4명 고발·2명 수사의뢰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강연회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2개 단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처하고 2명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받은 270명에 대해서는 식사비의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 과태료 1억8천여만원을 부과기로 했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자들이 고발 조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인 A씨, 예술인 B씨, 모 호텔 회장 C씨 등 3명은 지난 5일 광주 시내 한 호텔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 전 시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갖고 참석자 11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또 이 강연회 직전인 오후 5시~6시 30분 이 전 시장 지원조직인 N포럼의 공동대표 D씨와 E씨, 사무총장 F씨 등 3명은 이 전 시장의 공약을 듣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뒤 160명의 참석자들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관련자 4명을 기부행위

및 사조직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처하고, D, E씨는 수사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밝혀진 관련 단체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리는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270여명에게는 1인당 최소 66만원에서 75만원까지 모두 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각종 단체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청중동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곡동 땅 이상은 뭇은 차명”

<이명박 후보 형>

檢 ‘이명박 의혹’ 중간발표...김재정씨 소유는 인정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말형 이상은씨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 및 매각 대금을 이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이냐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4면> 이 후보를 둘러싼 고소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중간수사 결

과를 발표하고 서울 도곡동 대지의 ‘이 후보 차명보유’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검찰은 이씨가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100여 명이 넘는 거액의 돈을 금리가 낮은 채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고 이 돈 중에서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2천만~4천만원씩 15억여원을 97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매우 이

례적인 거래 양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관련해서는 계좌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및 납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지분을 실제 김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서울 도곡동 땅을 포스코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해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 사실상 당시 포항제철 회장인 김만재 한나라당 고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오늘 개성서 남북정상회담 첫 준비접촉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첫 준비접촉이 14일 개성에서 열린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13일 “북측이 오늘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내일 오전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갖자고 알려왔다”고 말

했다. 남측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측은 또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3명을 내보냈다고 알려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우일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41-11111111-1111-1111
41-11111111-1111-1111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41-11111111-1111-1111

LANEIGE